

국정원 '추측 재산 정보 조사'...권한 어디까지

“정상 업무” vs “정치 사찰”

국정원 “부패척결 TF서 김재정씨 자료 열람”

박계동씨 “TF운영은 야당후보 비리캐기용”

국가정보원이 또 다시 정치개입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정원이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논란은 국정원이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음을 인정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김재정씨의 자료 열람을 놓고 국정원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등에서는 국정원의 권한을 넘어선, 사실상의 ‘정치사찰’이라고 비판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정원, 부동산비리 조사 권한 있으나=국정원은 부패척결 TF에 소속된 5급 K씨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자부 자료를 열람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정원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까지 조사하는 게 적절인가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1호에 의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함축적

으로 해석해 제반 정보활동 과정에서 국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패 첩보를 수집·보고할 수 있다”며 부동산 비리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1호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의 수집의 범위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비리는 속해 있지 않다. 장운석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국정원이 관련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부패척결 TF 운영은 포괄적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국정원 입장을 지지한 뒤 “비리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행정전선망 이용 여부도 논란=김만복 국정원장은 지난 12일 “국정원에서는 토지·건물·세금 등 17개 아이템에 대한 행정전선망과 연동돼 있어 자료 접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

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장이 밝힌 ‘연동’의 의미가 ‘연결’은 아니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행정전선망과 연결돼 있어 아무 때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행자부 자료를 비롯한 전자정보망은 예로부터 국정원이 바로 접근할 수 있고 ‘전자정보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주요 행정전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16일 국정원의 TF(테스크포스)와 관련, 2004년 초 공직비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뒤 2006년 확대개편돼 총 2개과, 8개팀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이 2004년 초 3~4명으로 2개의 TF를 구성했다”면서 “2004년에 공직자 비리조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것의 목적은 지자체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야당 후보 전반의 비리캐기용이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檢, ‘李초본 부정발급’ 흥운식씨 조사

김혁규 의원에 전달 여부도 추적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 후보 가족의 초본과 부동산 거래 내역, 전과기록 등 개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돼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서울 신곡역동사무소에서 부정 발급된 이 후보 측의 주민등록 초본을 전직 경찰 권모(64,구속)씨로부터 넘겨받은 박근혜 후보 캠프의 흥운식(55)씨가 16일 오후 자진 출두함에 따라 누가 초본의 발급을 주도했는지, 초본이 박 후보 캠프나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금액이 오갔는지 등을 광범위하

게 조사했다. 검찰은 권씨가 흥씨의 부탁을 받고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와 마형 상은씨, 처남 김재정씨의 초본을 떼줬다고 주장한 반면, 흥씨는 권씨가 자발적으로 이들의 초본을 갖다준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대립 조사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이 후보 측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보였던 초본이 이 초본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김 의원 측으로 흘러들어간 과정도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한 낙부동과 방배3동에 서 이 후보와 부인 김씨, 자녀(1남3녀) 등 6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떼 나

치받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사무장 박모씨(수배 중)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작년 8월 국정원의 한 직원이 행자부 전선망에서 이전 시장 가족의 부동산 보유내역 등을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최근 자체 감찰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측이나 한나라당으로 부터 고소 또는 수사의뢰된 한나라당 이해훈·유승민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혁규·김종률 의원 등도 본격적으로 불러 의혹 폭로 배경과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李-朴 지지자 몸싸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들인 ‘임비연대’ 회원들이 16일 여의도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 뒤바뀐 李-朴...한 경선 요동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한나라, 검찰 고발키로

李 “초본 부정발급 朴-여권 연계 의혹”

朴 “잘못된 것... 검찰 수사 지켜볼 것”

한 달여 동안 계속됐던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향한 검증 공세는 한풀 꺾인 반면 이 전 시장 측의 현 정부와 박 전 대표 측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날로 높아가는 등 한나라당 경선 국면이 요동치고 있다.

국정원이 이 전시장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것이 확인되고 이 전 시장의 친인척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 과정에 박 전 대표 측 인사 일부 개입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나타나면서 공수가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전 시장의 14차례 위장전입 의혹과 친·인척의 부동산 매매 의혹으로 촉발됐던 사건들이 자료 유출

과정에 정부기관이나 박 전 대표 측 인사 개입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 전 시장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오는 19일 검증 청문회와 이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양배, 여론의 동향에 따라 경선 국면은 또 한차례 요동칠 것으로 보여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경선 판도의 불가측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은 16일 장충동 소피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21세기 ROTC포럼’ 초청 강연에서 초본 불법 발급 문제와 관련, “믿기지 않는다. 일단 지켜봐라 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이 전 시장 측 박형준 대변인은 “이 후보 친·인척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체포된 경찰간부 출신 권모씨와 박 전 대표 캠프 측 인사인 흥운식씨는 결국 한 팀(이른바 마포팀)이었다”며 “핵심은 박 전 대표 측 자료가 범여권에 넘어갔느냐 하는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폭로했던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박 전 대표 측 간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전 대표는 초본 부정발급에 캠프 외곽 인사가 개입된 사실에 대해 김재정 캠프 대변인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며 “아무리 외곽조직으로 활동한다지만 이렇게 정도를 견디지 않을 수 있느냐, 광장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묵묵부답이다. 검찰 수사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만 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16일 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자료열람 및 관련 테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관련자 검찰 고발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업 전 국정원 제2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르면 18일께 검찰 고발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정치공작의 최종 배후는 결국 청와대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당 소속 공작 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정원을 공식 항의 방문하고, 관련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 ‘新대북정책’ 논란 계속

이회창 “새 정책은 당 정체성 포기하는 것”

유연해진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을 둘러싼 내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월에 당론을 결정키로 한 가운데 당내 보수성향 인사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달 초 당의 새 대북정책이 발표된 직후 “북한 핵을 용인하려는 것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이회창 전 총재는 16일 강재섭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비판을 재게했다.

이 전 총재는 질의서에서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에 대한 지원·협력

대규모로 확대해 북의 개혁·개발을 촉진한다면서도 북핵폐기나 북의 개혁·개발과 연계시키지 않아 ‘주변 변한다’는 햇볕정책의 기초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6자 회담의 2·13합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국제공조를 외면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대북정책의 수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기초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차 출판기념회 성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의 출판기념회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 대표와 황우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안병훈, 홍사덕 공동 선대위원장 및 당 소속 의원 4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43명이 대거 참석해 세를 과시했으며, 이회창 전 총리와 김종호 전 내무장관, 서청원, 최병렬 캠프 상임고문과 김용환 캠프 고문, 손주환, 이형배, 윤영탁, 이수찬 전 의원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지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총 21일)

- 1차(7월 17~19일) : 이론강의(17일), 실기시험(18일), 휴식(19일)
- 2차(7월 24~26일) : 이론강의(24일), 실기시험(25일), 휴식(26일)
- 3차(7월 31~8월 2일) : 이론강의(31일), 실기시험(1일), 휴식(2일)

2. 원서접수 및 접수처

광주어거터대학교 HANJANG

TEL: 062-284,356, HP: 011-614-0180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한방선물-포부-허리디스크

다이어트-한방선물-포부-허리디스크

다이어트-한방선물-포부-허리디스크

문의 108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문지도사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www.jjang.co.kr

지리산한문지도사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수강문의 : 1588-7509(취업공부)

www.jjang.co.kr